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정책제안 토론회 자료

“지역분권 시대,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다”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13:00~17:00

장소
청년문화공간JU(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주최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문의 :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의제별라운드테이블
(13:50~15:50)

- 1.청년예술가 지역문화정책 기반 마련 및 지원 활성화
- 2.지방자치단체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
- 3.지역문화주체 및 생태계 지원
- 4.성평등과 젠더 갈수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 과제/개선방안
- 5.문화적 역량과 시민력 강화를 위한 지역공간 및 문화시설 활용전략
- 6.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관광 및 축제 정책의 혁신 방안

종합발표
(16:10~17:00)

문화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은
〈문화연대 지방선거 2018문화정책 - 10대 의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화정책제안 토론회

지역분권 시대, 문화정책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다

2018년 4월 17일(화) 13:00~17:00

청년문화공간JU (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

총론발제

(13:00 ~ 13:30)

-

지역문화 정책일반 :
지역분권의 시대 문화정책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종합발표

(16:10~17:00)

-

문화정책제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은 <문화연대 지방선거
2018문화정책 - 10대 의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의제별라운드테이블

(13:50~15:50)

-

1.청년예술가 지역문화정책 기반
마련 및 지원 활성화

2.지방자치단체 생활문화 정책의
주요 과제들

3.지역문화주체 및 생태계 지원

4.성평등과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 과제/개선방안

5.문화적 역량과 시민력 강화를 위한
지역공간 및 문화시설 활용전략

6.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관광 및
축제 정책의 혁신 방안

주최 :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문의 : 02)773-7707 culture918@gmail.com

■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지방선거 2018 문화정책 활동을 제안하며

1. 문화연대가 바라보는 '지방선거 2018'의 의미

(1) 촛불혁명 이후 풀뿌리민주주의, 생활민주주의 운동의 현재성

-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의 등장 이후 민주주의 경로에 대한 현주소, 가능성 확인
- 촛불혁명 이후 시민사회의 진화 과정에 대한 판단

(2) 2016년 총선 이후 보수 정권에 대한 평가와 정권 교체의 연속성

- 정권 교체 이후 첫 선거 : 문재인정부 1년에 대한 사회적 평가
- 비정상적인 보수 정권 내에서 지체되어 왔던 개혁, 혁신 정책과제들의 추진 가능성

(3) 지역문화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연계할 수 있는 선거

- 서울시 등의 혁신 정책/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환점

(4) 지역분권, 시민자치 등을 둘러싼 제도개혁의 가능성

(5) 지방정부를 둘러싼 협치 그리고 민+민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

(6) 보수 정치의 재구성 및 전환기

- 선거를 통한 보수의 출구 전략 혹은 전환점

(7) 개혁을 비롯한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

2. 문화연대의 '지방선거 2018'의 접근 전략 및 방향

(1) 정치 및 권력 지형 변화 과정에서 문화민주주의, 문화권 확대 모색

- 문화분권, 문화협치, 문화다양성, 시민자치 외

(2) 지역, 생활권의 문화민주주의와 시민자치 확대

- 지역문화생태계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공간과 주체 형성 전략 외

(3) 지역내 문화운동 주체들과 협력 기반 마련

(4) 기존 운동과제의 해결 및 진화 모색

- 경의선공유지, 민관 문화협치 확대 등

(5) 다층적인 접근을 통한 정책 솔루션 제시

- 협치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치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차별화된 정책 접근 필요

(6)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범민주주의 진영의 제도 정치 개혁 및 급진화

(7) 진보정치의 기반 및 가능성 확장

■ 문화연대 지방선거 2018 문화정책 주요 의제(안)

※ 오늘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위해 준비된 초안 자료이며, 다양한 논의 과정 및 결과를 반영하여 (가칭)〈문화연대 지방선거 2018 문화정책 제안서〉로 작성 및 공개될 예정입니다.

1. 문화분권의 시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 혁신 과제
2. 지역문화생태계와 커뮤니티 활성화
3. 지역문화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공공성 확장
4. 청년예술가 지역문화정책 기반 마련 및 지원 활성화
5.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6. 성평등과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 수립
7.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민주주의 확대
8. 지역문화 기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9.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 및 축제 사업 혁신
10. 지역문화 기반 문화산업 생태계 형성

1. 문화분권의 시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정 혁신 과제

(1) 제안 배경

- 촛불혁명과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행정 혁신이 강조되고 있음
- 문화정책, 문화행정의 경우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좀 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개혁과 혁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지역분권의 시대에 적합한 문화분권이 준비돼야 할 때. 특히 문화분권은 “지방으로의 권력 분배” 수준을 넘어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문화기본권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위한 지역문화에 숭생태계의 형성 및 공진화”를 목적으로 추진돼야 함

(2) 정책 방향

- “자율, 분권, 협치”의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문화정책 수립 및 문화행정 개혁 추진
- 도시 계획 수립 과정 자체에 문화적 관점과 가치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 및 행정 제도 마련
- 지역문화생태계가 지역분권의 핵심적 구성 요소이자 목적인 것을 정책, 제도적으로서 인지도,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문화분권과 문화협치 계획 수립
- 기존의 중앙 중심, 공급 방식의 지역문화 정책과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역(현장) 중심, 협치 방식의 지역문화 협력체계, 지원사업 구조 확립

(3) 제안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정책 정책 자문/협치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 예시 : 서울시의 문화시민도시정책자문위원회, 성북구의 창조문화도시위원회, 금천구의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외
- 지역문화 실태조사 활성화 및 전문화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실태조사를 실행할 수 있는 체계 및 로드맵 마련하고 지역문화격차를 비롯하여 지역문화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지표 개발, 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 추진

- 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 지표 체계 마련 및 관리 체계 구축
 - (가칭)지역문화환경 최소 기준(minimum list)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지역이 최소 기준 이상에 도달 할 수 있는 관리·지원체계 추진
- 국비/지방비 매칭형 문화재정 운용 및 문화예술 사업 추진방식 개혁
 - 사업별 국비/지방비 매칭형 사업 추진방식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간) 포괄적 문화재정 협력방식으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적 지역 문화재원 조성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재정운용(재원 확보 및 투자) 계획 수립
- 광역 단위의 (가칭)지역문화협치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활성화
 - 민간, 지역문화예술생태계가 주도할 수 있는 지역문화 환경 조성
 - 이를 위해 광역 단위의 민간과 지원기관이 소통, 공유, 협력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2. 지역문화생태계와 커뮤니티 활성화

(1) 제안 배경

- 지역분권이 주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별 문화계획 수립 및 생활권역 중심의 문화정책 구조 필요
-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권에 입각하여 지역민의 문화적권리를 확대하고 자율적 시민자치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요청되고 있음
- 지역문화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 하달되는 방식이며, 지역문화지원기구 역시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기관의 하부구조화 된 상황에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사업구성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함
- 일상과 삶을 조직하는 주체적 과정으로서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때
- 지역민에게는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지역공동체적 삶을, 문화예술인에게는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
- 문화 자치와 지역문화, 문화 향유와 문화복지, 전통문화와 인문정신, 문화 다양성과 문화 교류, 예술창작과 예술인 지원 등 문화정책의 핵심 분야 정책의제와 함께 각 지역이 당면한 현안 지역별로 특색 있는 운영 방식 요청 됨

(2) 정책 방향

-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에 기반 한 지역문화정책 수립
- 공공영역과 민간 문화예술 영역 간의 협치(거버넌스)구조 확장
- 지역 문화자원 발견 및 공유 확대
- 시민의 문화적 주체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주민의 삶에 기반 한 문화환경을 조성
- 지역문화 협치에 기반 한 지역 문화시설 및 공간의 시민자산화
- 지역커뮤니티문화에 기반 한 공공일자리를 확대

- 문화예술인을 포함한 지역민이 스스로 문화예술적 가치를 실험하고 창작역량을 확장 할 수 있는 활동권 보장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기반 한 지역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존

(3) 제안 내용

-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민에 밀착 한 지역별 문화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
- 시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시민문화권 조례 제정 및 문화권 선언 추진
- 지역의 문화생태를 발견하고 예술적으로 활용을 위하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실시
 - (가칭)지역 문화예술자원 조사단과 문화예술 워킹단을 조직·운영
- 생활터전에 기반 한 창작 확대와 지역자치문화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일자리 매칭 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자원에 기반 한 창작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문화콘텐츠 유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 지역 내 문화예술 인적자원 지원 및 양성을 위한 코워킹 오피스 조성
- 지역 내 (가칭) 문화예술 지원센터 설립하여 지역 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안정화
 - 지역 내 매개인력 발굴 및 양성하여 지역민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기획·확대
 - 지역의 예술가, 문화기획자 등 지역문화인력 커뮤니티 운영 지원
- 지역 별 특화되고 접근이 용이한 공공 창작센터 확보(설립)하여 지역민과의 문화예술 교류시설로 선정 관리
- 문화예술 관련 창업지원 제도 마련 및 창작물유통 프로세스 구축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장사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경제 활성화

3. 지역문화 공간의 재구성을 통한 공공성 확장

(1) 제안 배경

- 지역 문화시설의 난개발과 소프트웨어와 인력 중심의 지원 필요
 -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의 문화시설에 대한 건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과정의 부재와 안정적인 예산확보 및 인력 확충 부족의 한계를 보임
 - 지역 문화시설의 경우 경영 없는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은 지 오래되었고, 각종 선심성 정책으로 문화시설 건립이 악용되는 경우도 빈번함
 - 지역의 문화시설 난개발로 인해 정량적 문화지표는 증가한데 반해 실제 주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은 증가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
-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거점으로서의 유희부지 및 공공부지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 지역 내 유희부지나 공원과 광장과 같은 공공부지의 경우에도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인 행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 지역의 중요한 공간 자원들에 대한 자율적이고 주민 주도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동적인 수혜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한계
 - 지역주민들의 민주주의적 역량강화와 문화적 가치 확대를 위한 거점으로서 지역 공간들이 활용되어야 함

(2) 정책 방향

- 지역의 문화시설 및 공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구조 및 체계를 구축
-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 및 공간 운영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안 수립
- 지역의 문화시설 및 공간의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평가제도 마련
- 지역주민의 민주주의 역량강화와 지역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지원체계 구축

(3) 제안 내용

- 지역 내 문화시설 및 공간 건립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주체로서 지역주민, 문화시설 운영주체,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지역문화공간위원회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 내 주체들의 문화적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시설 및 공간 운영에 대한 통합 계획안 수립
- 문화시설 및 공간과 관련한 주요결정 과정, 관련자료, 회의록 등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수렴, 공론화 과정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주민 참여 확대
- 문화시설 건립계획 시 문화영향평가, 관련 연구용역 및 계획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 주민여론 조사 등의 통해 건립 심의위원회에서 반영하여 건립여부 결정
- 시설의 규모나 역할에 따라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최소 전문인력 및 예산을 정하여, 문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휴부지에 활용 및 운영에 위한 민간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타당성여부를 검토 후 해당 유휴부지에 대한 운영권을 위탁
 - 초기에는 시설투자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지방정부에서 주로 부담을 하되, 점차 그 비율을 줄여나고, 민간자본을 늘려나감으로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공동자산화를 통해 독립성 확보
- 공원, 광장 등과 같은 공공부지에 대한 주민들의 주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존 허가제 폐지

4. 청년예술가 지역문화정책 기반 마련 및 지원 활성화

(1) 제안 배경

- 지역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지속가능한 시민 주체의 형성과 지역별 문화계획 수립이 필요함(일상과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
-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는 등의 생활문화, 생활예술의 중요성이 강조됨
- 이에 따라, 지역에서 문화예술의 주체로 부상하고 있는 청년 예술인과의 협력과 활동 지원이 주요 과제임
- 수많은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예술가로 등장하지만 대다수가 지역을 대학가의 주변 정도로만 인식하며, 임대료 부담 등으로 대학 인근 지역을 벗어나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음
-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대학가를 창조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4개 대학이 자치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과 연계된 활동을 시작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정책 방향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청년 예술인들이 지역에 장기간 머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고민을 가질 여유가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청년 예술인은 지역과 연계된 공공적인 일거리/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임
- 장르별로 특화된 공간이 극히 소수의 지역에 밀집(홍대공연장, 대학로-소극장 등)되어 있음. 청년 예술인들이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예술창작 활동이나, 발표 등과 같이 자신의 활동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함
- 공공공간이나 예술인주택과 같은 특성화 공간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거나 입주 경쟁률이 높은 편
- 기존 캠퍼스타운 정책이 다분히 청년의 창업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며 청년 예술인 정책은 부재함

(3) 제안 내용

- 청년 문화예술 공간과 지역과의 연계 활동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
 - : 청년 당사자 주체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존중, 지역에 대한 이해도 상승
- 각 지역에 소재한 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일거리/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협력과 지원
 - : 청년 예술인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강사 채용 진행
-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공공시설/공유지를 활용하여 창작 및 발표 공간을 확보하고 나아가 청년 예술인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
- 지역 지원사업 일자리 등 정보 플랫폼 구축

5.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역사성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 제안 배경

-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문화의 중요성과 문화적 자산이 가지는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사회적 흐름속에서도 문화유산 정책은 여전히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보여줌
 -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역할이자 문화다양성의 철학에 근거한 다양한 문화들의 교류와 융합, 통섭의 역할로서의 문화유산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문화유산정책의 방향도 유/무형 문화재 중심이 아닌, 문화유산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과 의미, 가치와 철학에 대해 집중하고 이를 확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
- 일상과 지역이 결합된 문화유산정책 수립
 - 보존과 관리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일상이나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정책적 방향전환이 필요
 - 문화예술교육과 연계한 살아있는 문화유산 정책에 대한 접근

(2) 정책 방향

- 보존과 관리 중심이 아닌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화정책 구조 수립 필요
- 문화유산의 물질성보다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문화유산의 현재성을 고려한 문화유산 지원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문화유산에 대한 교육 및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의 문화유산 정책에 집중

(3) 제안 내용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문화유산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역문화유산 전문 기구 설치
- 유/무형 문화재 중심의 문화유산 개념을 넘어 지역성, 역사성, 문화다양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역문화유산 정책계획(안) 수립
- 통합적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문화유산 관련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문화유산 교육사업 확대
- 기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지원과 새로운 문화자원 발굴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과 지원인력 확보

6. 성평등과 젠더 감수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정책 수립

(1) 제안 배경

- '일상'과 '생활'이라는 개념은, 지역문화에서도 중심의제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지역문화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연성이 높음
- 성평등 문화와 젠더 감수성 확립이 '일상'과 '생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함
- 지역 문화사업, 다시 말해 공동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각종 차별에 무딘 닫힌 사회를 열려진 사회로 만들고 이를 다시 확산해야 함
- 지역의 여성 현안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만나 만연하는 차별적 상황들에 대해 공유하면서, 여성과 함께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를 바꿔 가야 함
-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 행동에서 행해지는 관습에 문화적 접근으로 새로운 인식의 바람을 불어넣어야 함
- 경제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젠더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
-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정치권에서의 성평등 문화 실현과 젠더 감수성 확립이 이뤄져야 함

(2) 정책 방향

- 성평등 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적 관행과 성평등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있음
- 여성의 경제적 역할은 증가했으나 남성의 가사/돌봄 참여는 낮으며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의식이 변화하지 않음
- 각 지역의 정치인들은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정책 수립 시 남성중심적 시선을 배제하기 어려움

(3) 제안 내용

- 성평등활동지원센터를 전국 지역의 권역별 설치하여 성평등과 젠더감수성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
- 여성 예술인 경력단절지원, 육아지원, 지원별로 설립
- 여성 후보 공천 비율 상향 조정하고 등록인 수를 늘림(공직선거법 참고)
- 여성문화예술인 보호관 제도

7.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민주주의 확대

(1) 제안 배경

-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2014년 1월 28일)으로 지역 문화진흥의 기본원칙(동법 제3조)이 '지역 간 의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문화 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의 우선적 보존' 등으로 제시됨
- 지역 문화진흥법 제정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지역 문화 정책은 여전히 중앙 정부의 전 달 체계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중앙 집권적인 사업 구조와 예산 편성은 지역 문화를 공급형 공공사업에 의존적인 체계로 고착화하고 있음
- 지역 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기반한 시민 자율적이고, 주민 생활 환경을 중심에 둔 중장기적 정책 패러다임의 구조화가 시급함

(2) 정책 방향

- 지역의 정체성과 생태계에 기반한 시민자치 문화 및 생활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구조 형성
- 지역 내 삶의 기술, 생활창작 등을 둘러싼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전환도시 등의 혁신적인 시민사회 패러다임과 연계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문화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조례) 마련 및 지원정책 다 각화
- 지역 문화정책의 관계망 속에서 생활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혁신적이고 통섭적인 접근 필요

(3) 제안 내용

- 생활예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화(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생활문화 단체 및 공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존의 형식화된(탑다운 방식의 마스터플랜 문화도시 계획수립에서 벗어나 시민자치와 생활문화의 가치와 질감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적 시민권에 기초한 시민문화도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통섭적 문화계획', '예술행정 혁신을 위한 문

화협치' 등을 '빌드 업 플랜'(build-up plan) 방식으로 수립

- 지역 내 생활문화 활동과 사회적 혁신 활동 상호 간에 창의적이고 통섭적인 연계 사업 추진 : 도시농업, 가드닝, 적정기술, 제작문화, 생활창작(핸드메이드, DIY 등), 문화예술교육,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 등과 시민자치, 생활문화 활동 연계
- 생활권 내 생활문화 공간 지원정책 다각화 : 기존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시민자치 문화와 생활예술 주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 활용 전략 및 지원사업 활성화, 이를 위해 지역 내 생활문화 공간을 통합적으로 네트워킹하고 조율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공간들을 발굴하고 조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가칭)〈지역생활문화공간 공유센터〉를 설치 및 활용
- 공공문화기반시설 연계 생활문화 커뮤니티 지원사업 활성화
- 지역성의 관점에서 생활문화 지원정책에 대한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시도

8. 지역문화 기반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회적 경제 환경 조성

(1) 제안 배경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와 빈곤을 양산하는 자본주의 실패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중문화산업의 전면화로 예술창작을 비롯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위축이 진행.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더 심각한 고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의욕적으로 활동을 만들어나갈 만한 물적 기반이 빈약함
- 기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으나 문화예술인들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부족과 육성/지원정책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2) 정책 방향

-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
- 사회적경제와 연동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반 제공
- 지역단위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 지원방안 정착
- 진로탐색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함

(3) 제안 내용

- 지방자치단체 내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1학생 - 1문화예술 - 1체육 활동’ 기회제공을 추진하는 교육청의 교육방향을 강화 : 이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 활동을 지원
 - 방과후학교, 마을결합형 학교,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효과성을 높이는 협동조합 역할 강화와 역량 제고 지원
 - 방과후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 현행 정책 추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로 확장

- 진로직업체험 '꿈길' 전산망에 대응되는 광역 단위 (가칭)문화예술인력정보센터 구축 연계
- 문화부와 노동부 협력사업으로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을 전국 단위로 추진
- 지역 단위 정책전달체계를 지역 문화 생태계 협력체계로 전환시키고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한 육성교육과정을 협력체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함

9.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광 및 축제 사업 혁신

(1) 제안 배경

■ 관광의 비경제적 가치 확장

- 개발, 팽창 중심의 관광산업을 넘어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등 관광 도시에서 주민들과 관광객이 화합하는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노력이 관광도시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음

■ 국내 관광정책 현황

-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선정
-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관광복지 여건을 조성하고, 시간·비용·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문화 격차 완화 기대 :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개선 지속,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
- 전국적으로 지역문화 관련 축제의 양적 팽창은 이루어졌으나 주민들의 삶의 질, 문화기본권과 연계된 축제 환경 개선은 다양한 어려움과 직면하고 있음
- 여전히 지역문화예술생태계, 주민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홍보성, 치적성 지역문화 축제의 막개발이 계속되고 있음

(2) 정책 방향

■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통한 관광객 여행 편의 증진

- 관광객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객 여행편의 증진
- 관광약자의 이동불편 완화를 위한 관광지 접근성 개선 및 정보접근성 강화

■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촉진

- 관광객과 주민 간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필요 : ‘UNWTO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포럼’참조,

공정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 주민참여 정책의 편성 등 지역기반 관광활성화 정책 추진
- 지역문화생태계에 기반한 협치형 지역문화축제 환경 조성
- 지역문화생태계가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되는 지역문화축제 구조 마련

(3) 제안 내용

- 시민이 행복한 여행지원 강화
 - 지역문화의 역량과 특성이 반영된 표준 여행행복 지표 개발 및 연구조사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여행바우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신청요건 완화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장애 없이 누구나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소외자를 위한 여행지원 사업 시행
 -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저소득층,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대상 맞춤형 지역문화 관광상품 개발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지 정보와 숙박 시설 정보를 공유하여 원활한 국내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문화관광 플랫폼 협력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가칭)지역문화축제지원센터 설립
 - 지역문화축제의 중장기 발전 방향, 주요 축제별 상호보완 및 공진화, 지역문화축제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체계적 지원
 - 지역문화축제(대표 축제, 동단위 축제 등)에 대한 일상적인 협치, 지원, 자원 공유 등을 위한 (가칭)지역문화축제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10. 지역문화 기반 문화산업 생태계 형성

(1) 제안 배경

■ 국내 문화산업 정책 현황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선정
-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확대’, ‘한류를 통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 진출 확대’를 주요계획으로 담고 있음
- 문화산업 생태계의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만하나,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창작사와 개인창작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
- 그동안 문화산업 정책은 미디어/유통/플랫폼으로 대변되는 독점적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뤄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소창작사와 개인창작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산업 생태계의 환경 조성

- 대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은 소위 수도권지역과 타 지역 간에 극심한 환경적 격차를 만들어 왔음
- 대부분의 주요 문화산업은 서울중심의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타 지역은 문화산업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조차 갖춰지지 않은 지역이 다수
-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통한 차별성을 가진 문화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2) 정책 방향

■ 지역고유의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초 산업 환경 지원

- 수도권과 타 지역 간에 문화산업 관련 격차를 줄이기 위한 문화산업 인프라, 전문인력, 제도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지역민들이 지역의 문화산업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필요

■ 지역 문화산업 전문인력들의 활동환경 조성

- 지역 문화산업 전문인력들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
- 지역 고유 문화 콘텐츠의 특성화를 위한 콘텐츠 발굴 및 연구 개발

(3) 제안 내용

-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기반 중소기업 지원정책 확대
- 문화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문화산업 인력양성 교육비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지역 문화산업의 안정적 수익확보를 위한 지역문화산업 화폐 개발
- 지역 간 협력 및 수도권지역과 교류사업 확대
- 수도권지역과의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수도권지역과의 교류 협력사업 강화
- 지자체 간에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산업 정책연구, 지표개발, 산업통계 정보 공유
- 지역 고유의 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 지역 특성화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 확대
- 지역미디어센터를 통한 지역 콘텐츠 기반 콘텐츠 크리에이터 지원 확대
- 문화산업 불공정거래 및 저작권 침해사례 지역신고센터 설치